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정책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장건오¹

¹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A Review of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SME Informatization Policy

Geon-Oh Jang¹

¹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Information Business Dept.

요약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 has achieved the current economy growth based on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was focused on large companies. However, small businesses can be of great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the information for small businesses can promote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nd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at a time. Currently the national policy for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is being confronted with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a decrease in a national budget.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esent policy related to the information for small businesses and draw several issues of it. Based on them, finally I will suggest a new policy direction with three categories, which are diversification of the consumer-directed support policy,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oriented support policy and long-term dynamic force for growth.

Key Words : SME Informatization Policy

1. 서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기업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중소기업청[6]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수 2,974천개, 종사자 수 11,149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고용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8,071개, 471,345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종사자수의 경우 일본과 대만이 70%대, 미국과 영국이 50%대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이 전년대비 1.1%p 종사자 수 감소를 보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1.1%p의 증가를 보이며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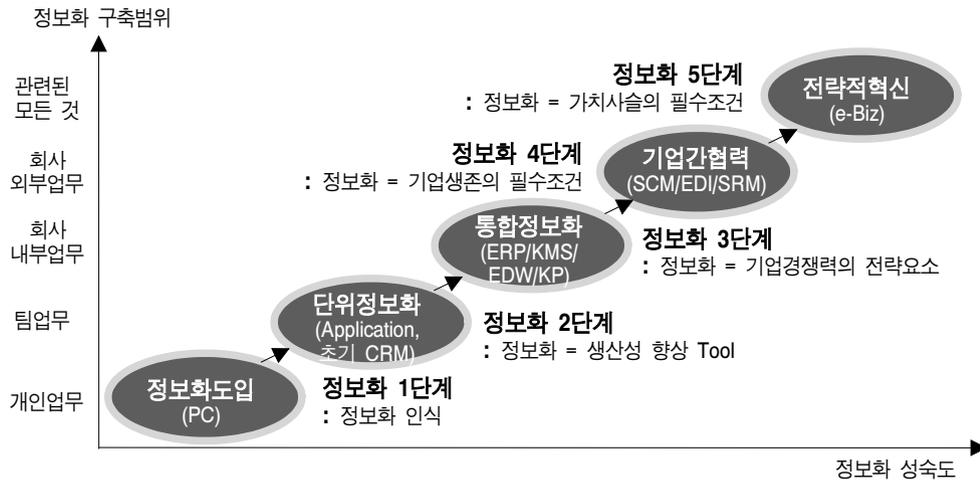
정보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 검증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정보화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의 점수는 54.57점으로 [그림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화 성숙모형의 통합정보화 단계

*교신저자 : 장건오(jgo@tipa.or.kr)

접수일 09년 12월 22일

수정일 10년 03월 31일

게재확정일 10년 04월 09일



[그림 1] 정보화 성숙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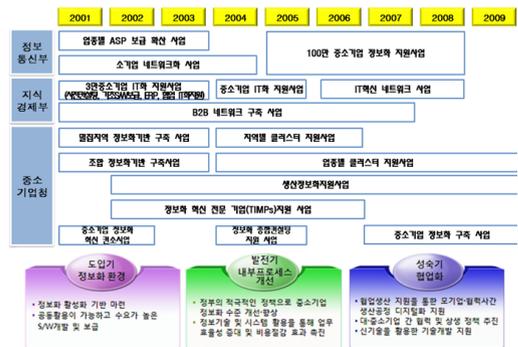
에 이르고 있다[3]. 정보화 성숙모형은 중소기업 정보화의 발전단계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는 가치사슬의 보조활동 영역에서 정보화의 효과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본원적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최근에는 변동이 심한 경제상황과 빠른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보화의 수요가 ERP, CRM과 같은 단위정보화영역이 아닌 SCM, EDI와 같은 기업간 협력 단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SaaS, Mobile business, Green IT 등 다양한 이슈에 부합하는 영역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연간 4만개사가 새롭게 창업하여 중소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영역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이들 정책에 기반을 둔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현안과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보화지원 현황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화 영역으로 지원된 사업과 목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에 정보화 기반조성정책이 처음 시행되었고 2005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로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0년 현 시

점에서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예산은 매년 감소하여 2009년 기준으로는 2005년 대비 절반수준인 174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림 2] 부처/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현재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 업종별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은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은 ERP, CRM과 같은 내부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영역을 지원하며,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POP, MES와 같은 제조 환경에 특화된 정보화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과 업종별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협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SCM, EDI, 공동사업 운영시스템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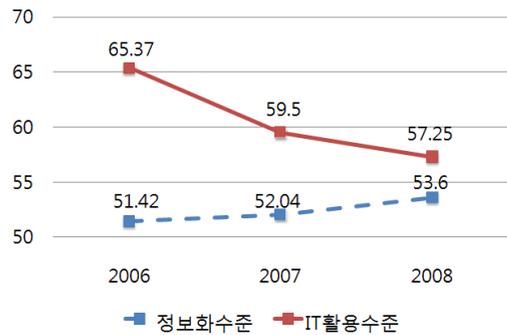
3. 기존 정보화지원사업의 문제점

기존에 시행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의사결정 시간의 단축, 인건비 절감, 불량률 감소, 데이터도입시간의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다[4].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의 동일한 형태의 자금지원방식과 성과측정의 난해함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는 곧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예산축소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여 올해에는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한 174억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도입하는 데에 느끼는 애로사항이 ‘정보화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보화 도입 및 확대가 불필요한 이유로 지적하는 ‘현재 정보화수준에 만족’, ‘비용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에 예산의 감소는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3].

이는 정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Hassink가 자신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성공과를 얻고자 할 때에 고려할 요소가 정책시행과정의 효율성이라 지적한 것에 반해, 적은 예산으로 인해 기업선정에 많은 평가과정을 거치고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가지는 1년 단위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현재 방식은 실질적으로 수월한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10].

또한 Suarez는 산발적인 정책지원보다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1].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은 확산과 촉진위주의 정책으로 정보시스템 지원 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산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정책의 평면적인 지원은 2009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그림 3]에서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정보화수준에 비해 IT활용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3].

IT활용수준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는 통합정보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정보화에 집중된 사업영역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보화역량이 기초적인 시스템 구축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확장성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ERP, CRM과 같은



[그림 3] 연도별 정보화수준 및 IT활용수준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을 주로 지원한 사업의 반작용으로, 기업의 성장에 따라 다른 영역으로 정보화가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확장성을 미리 고려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검토되는 요소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있는데,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초기 구축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둘째, 정보화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정보화의 성과가 도입 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비해, 현재의 정보화사업은 연단위 성과를 산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김탁상과 오상영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시점을 차등화하여 사업 종료 시 지원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1년 후 업무 프로세스의 성과와 학습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2년 후 조직단위의 재무적 성과와 고객관리의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 하지만 현재 매년 시행되는 사후설문을 통한 성과평가는 시점에 대한 고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의 불완전한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사업자체를 실패로 몰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IT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삼성SDS나 LG CNS, SK C&C와 같은 대형SI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개발성 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패키지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형 IT기업의 참여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은 IT업체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잦은 도산과 시스템의 추가적인 기술지원 및 A/S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이는 곧 정보화지원사업의 후속조치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

다. 현재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은 개발교육과 사용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개발교육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전공과정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심재륜, 최진호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은 핵심 전공과정을 바탕으로 지역과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공학원론 중심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정보화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사업관리를 위한 교육에 국한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IT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인력난이 늘 문제시되는 중소기업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정책이 이전의 중소기업정보화정책과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 정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종에 따라 특화하여 지원되는 산업이나 지역에 특화된 지원 정책은 일부 존재하지만, Suarez의 주장과 같이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 분야의 정책은 실효성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보화정책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1].

4.1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I :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그림 2]에서 살펴본 각 부처의 정책은 현재까지도 불특정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정보화지원 사업은 정보화도입이 초기수준이었으므로 정보화영역의 세부적인 수요를 알 수 없었으며, 수요를 창출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5].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은 지원자금의 성격이 용자 혹은 출자의 개념이 아닌 무상지원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최근 시행되는 기술사업의 경우 지원자금이 용자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무상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자금은 정보화의 성공보다는 지원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1].

또한 정보화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모바일 앱(App), 그린IT, IPTV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영역의 확장은 일반소비자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기업(10인 미만), 중소기업(100인 미만), 중견기업(300인 미만)으로 구분할 때에 우선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경우는 정보화 영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필요성이 크지가 않다.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단계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업무부하가 있으므로, 무거운 정보화 시스템보다는 웹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SaaS형IT기반경영혁신 강화사업과 같은 사용의 편리성이 강조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를 거쳐 중소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생산라인의 증가, 직원 수의 증가,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정보화를 통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ERP, CRM과 같은 개별 정보화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단계에 진입하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잦아지고 정보의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SCM, EDI와 같은 정보동기화가 일차적인 목표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기업의 생명주기 곡선과 같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사업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정보화지원사업체계의 구축과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II :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기존의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정보화의 일반적인 효과는 효율성 제고 또는 원가절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영역이 가치사슬의 보조활동 영역에서 정보화의 효과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본원적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업무지원형(IT Supported business) 관점에서 비즈니스 지향형(Business driven IT) 정보화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정보화가 단순히 인력을 대체하거나 현재의 업무를 함리적으로 대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과 같은 핵심산업으로 진출하는 기회 포착의 도

구로서 사용됨을 말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분야를 이용한 사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인해 무선인터넷 환경과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모바일 오피스를 활용하는 보조영역과 모바일 앱(Applications)을 활용하여 마케팅 채널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는 등의, 본원적 활동영역의 개척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앱센터(App Center)에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여 게임, 위치기반, SNS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영역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IPTV의 활용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PTV는 양방향송수신을 기본으로 하여 소비자의 프로슈머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엄청난 수의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 영역을 오픈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면,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여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

4.3 현안과제와 정책방향Ⅲ: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

앞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부처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사업의 영역이 ERP로 대표되는 패키지 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정보화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에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까지도 정보화와 관련된 영역이 업무지원이나 기능개선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는 단순정보화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 장기간 수행이 되고 기업의 가치성장에 도움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연단위 사업 수행과 감소추세의 사업예산배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그린IT와 IT융복합과 같은 새로운 IT패러다임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그린IT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성과의 내재화가 일어나는 정보화영역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요인은 중

소기업의 그린IT 도입에 난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유럽의 RoHS & REACH와 WEEE 같은 환경규제는 수출 중심형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8]. 하지만 그린IT를 통해 환경규제의 현황을 관리하고 생산에서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 사용량을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한 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화의 영역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원화된 정책집행기관을 통해 하나의 시각을 유지하며 종합적이고 연계성이 강조된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원화된 정책집행기관의 부재는 곧 산발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입안단계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보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문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화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성과 관리와 지원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정보화 예산의 관리도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기업가치창출의 본원적 활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각 부처와 산업계가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1] 김락상, 오상영,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시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4, pp. 872-876, 2009.
- [2] 심재륜, 최진호, “‘업종-기술’ 매칭 테이블을 활용한 IT인력양성용 산학협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8, No. 2, pp. 286-296, 2007.
-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9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조사”, 2009.
-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9 정보화지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09.
-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정보화정책 개편 방안 연구”, 2009.11.
- [6] 중소기업청, “2009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09.
-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9.08.
- [8] EIATRACK, <http://www.eiatrack.org/>
- [9] 전자신문, 기획기사 [거꾸로 가는 中企 정보화], 2009.10.19.
- [10] Hassink, R., “Towards regionally embedded innovation support systems in South Korea?”. Seoul, The 16th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pp.1-29, 1999.
- [11] Suarez, L. V., “The Structures of Cooperation: Downscaling, Outsourcing and the Networked Alli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1998.

장 건 오(Geon-Oh Jang)

[정회원]



- 199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박사과정 수료)
- 1993년 8월 ~ 2001년 8월 : 한국전산원 근무
- 2001년 9월 ~ 현재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부장

<관심분야>

중소기업 정보화, 정보보호, 마케팅 정보화